

第243回國會
(定期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9月16日(火)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국무총리실소관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국무총리실소관

審査된案件

- | | |
|----------------------------|---|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1 |
| 가. 국무총리실소관 | |
|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 |
| 가. 국무총리실소관 | |

(10시17분 개의)

○**委員長 李在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태풍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수해를 입으신 이재민·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복구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결산심사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시다마는 이러한 결산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3월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결산을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해서 충분히 심사한 후 정기국회 전까지 의결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결산을 정기국회 전

에 미리 심의·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결산심사에 정부는 물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전체회의가 끝난 후 예결소위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공정위와 국가보훈처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기금결산을 심사한 후 이어서 예결소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8일에는 소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鄭明世 이사장이 국제도량형위원회 회의 참석차 오늘 결산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국무총리실소관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국무총리실소관

(10시20분)

○委員長 李在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실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실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소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소관 기관을 대표하여 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국무조정실장 李永鐸입니다.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43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02년도 국무총리실소관 6개 기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국무총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면서 정부 각 부처 정책의 조정, 정부 업무의 심사평가, 규제개혁,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범정부적 현안 업무도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현안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므로써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더욱 충실히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감독기준의 선진화 및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민 위주의 고품질 민원 서비스 개선,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기능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통하여 국가 비상대비체제를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유사시 국가 동원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율과 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무총리실소관 6개 기관은 모두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소관 기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8억 2800만 원이었으나 과징금 수입의 증가 등으로 90억 3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36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무총리실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7266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7237억 4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무총리실소관 예비비 18억 5100만 원은 국무총리실소관 3개 기관의 봉급조정수당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전담기구설치 경비로 지출 결정되어 이 중 18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국무총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무조정실소관은 기획수석조정관이, 금융감독위원회소관은 상임위원이, 국무총리비서실소관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소관은 해당 사무

처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소관은 위원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국무조정실장!

그 후에 인사가 새로 이루어져서 오늘 처음 나오는 분은, 우선 보고하기 전에 새로 배석한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죄송합니다.

저희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에 의해서 2명의 수석조정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임명을 받은 趙泳澤 수석조정관입니다.

다음에 사회수석조정관으로 발령을 받은 崔慶洙 수석조정관입니다.

이외에 일부 조정관 이동이 있었습니다.

심사평가조정관으로 부임한 李正煥 조정관입니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에 兪宗相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기획수석! 보고하시지요.

○**國務調整室企劃首席調整官 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입니다.

국무총리실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세출예산액은 6893억 9200만 원이었으나 예산 결정 후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원, 예비비 17억 67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세출예산현액은 6930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6915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9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전담기구 설치 경비로 17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일반행정 예산 중 13억 24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2억 51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부패방지위원회 개청 준비와 수해방지 대책 추진 등에 따라 10억 7300만 원이 전용되었

습니다.

그리고 5개 연구회에 계상되었던 활성화대책비를 42개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 배정함에 따라 183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총 6915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 국무조정실 일반행정 예산은 195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인건비로 86억 9900만 원, 기본사업비로 28억 1300만 원, 그리고 정책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각종 기획단 운영 등 주요사업비로 80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42개 출연연구기관과 5개 연구회 사업 및 운영비로 6719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일반행정 예산 중 용역비 9억 7700만 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행기간의 부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3개 사업 용역비 5억 4500만 원, 국가정책정보관리시스템 용역비 4억 32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일반행정 예산 중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5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2002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사이동이 없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없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상임위원 나와서 보고하세요.

○**金融監督委員會常任委員 梁天植**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梁天植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린 후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재산수입 5억 7821만 원 및 경상이전수입 3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38억 2821만 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실제로 징수 결정된 액수는 90억 898만 원이었으며, 징수결정

액 대비 40.6%에 해당하는 36억 5686만 원이 수납되었고, 납기미도래 등으로 53억 52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IBRD 차관의 은행 재전대분에 대한 이자수입 2억 8654만 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 33억 6053만 원, 과징금 납부연체에 대한 가산금 731만 원, 호봉 정정 등에 따른 급여반납분 등 24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중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 30억 8192만 원과 부과업체의 재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22억 7019만 원으로 총 53억 52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71억 4620만 원과 동액으로 예산현액의 85.4%인 61억 26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 43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중 전용액은 1억 36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직제 개정으로 정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8494만 원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여비 부족액 1866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71억 4620만 원 중 85.4%에 해당하는 61억 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30억 3286만 원, 기본사업비 23억 2655만 원과 주요사업비로 IBRD 기술지원차관 원리금 상환액 7억 4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중 불용액은 10억 436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기관운영기본사업비 집행잔액 2억 5649만 원 및 IBRD 기술지원차관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7억 87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비서실 보고를 듣기 전에 비서실장께서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나와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주요 간부의 변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이번 8월 초에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金大坤입니다.

앞으로 총리님의 국정 활동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총리님께서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金在晟 정무수석비서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러면 金在晟 정무수석비서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政務首席秘書官 金在晟**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金在晟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의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69억 5904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공관 보수공사비 5억 2001만 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 3097만 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75억 1003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75억 898만 원이 지출되고, 10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3097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족분 8844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등에서 전용하였고, 공관 보수공사 부족분 충당을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2억 43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75억 898만 원 중 인건비로 34억 4682만 원, 경상적 기본사업비로 10억 807만 원, 기준성 기본사업비로 3억 7181만 원, 교육훈련비로 697만 원, 공관 관리비로 8억 5379만 원, 국정활동 수행경비로 17억 7299만 원, 업무전산화로 48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 104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비서실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보고하시지요.
○國民苦衷處理委員會事務處長 金周燮 국민고충처리위원회 金周燮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위원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1억 4157만 원으로 이 중 68억 962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5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06만 원의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미편성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수당부족액 606만 원과 예산 수정 없이 인상 지급키로 결정된 직책별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은 봉급수당 등 인건비에 약 61%인 42억 1566만 원, 위원회 홍보·조사관의 현지조사 활동비 등 고충민원처리 지원에 6억 3952만 원, 각종 공공요금·인쇄비 등 경상사업비 등에 9억 6602만 원, 직책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2억 3570만 원, 행정상담위원 운영에 1억 9987만 원, 조사관 현지조사 여비·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등의 고충민원처리에 5억 6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4533만 원으로 직제개정으로 증원된 9명 중 일부 인력충원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 1억 4661만 원과 보수단가와 연봉계약액가의 차이로 인한 계약직공무원 보수집행잔액 9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위원회 사무처장 보고해 주시길요.

○非常企劃委員會事務處長 陳炳國 비상기획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200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56억 7059만 원에 예비비 343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7억 498만 2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6억 8851만 원을 집행하고 1647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내역은 총 2억 4893만 원이며 그 중 인건비 부족액 1억 9830만 원은 예산에 미반영된 별도 정원 2명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2명 발생에 따른 지출증가분이고 사업량 증가부분 5063만 원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추가발간과 조직관련 TF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 안보유관기관 협의 및 정책자문사업 소요 발생으로 인한 비용 부족으로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25쪽입니다.

총 56억 8851만 원 중 인건비 37억 4998만 9000원,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9억 7988만 2000원, 전쟁지원능력평가기준 개발비 5530만 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1억 4549만 4000원, 국가동원능력조사 1억 550만 2000원, 비상대비 업무전산화사업으로 6억 52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1647만 2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위원회 2002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길요.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李承姬입니다.

2002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9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발생으로 157만 5000원,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의 발생이 2749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4173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900만 원, 전용증감액이 1억 85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60억 3800만 원으로 불용액이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은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로서 지출결정액이 1900만 원, 지출

액이 1870만 원, 불용 2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용액은 총 1억 85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부족액 8000만 원, 사업량 증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60억 3800만 원으로서 인건비 19억 3000만 원,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19억 8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사업 등 아래의 7개 사업비가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4040만 원으로서 계획 변경 및 취소 670만 원, 정원 및 기준초봉 미달 운영 36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10만 원,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무총리실소관 6개 기관의 결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문제점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2002 회계연도 국무총리실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기관별 검토의견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소관입니다.

2002년 국무조정실은 195억 원을 지출하였는바 결산상 향후 시정 및 개선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사업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연구용역예산은 전체 예산의 12.2%에 해당하는 23억 원이 계상되어 이 중 39.9%에 해당하는 9억 3335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용 또는 이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규모 가운데 큰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연구용역사업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7567만 원에 수행한 '규제개혁발전전략수립연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2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에 연구원 등 22인의 인건비로 4475만 원을 집행하고, 회의비로는 전체 용역비의 31%에 해당하는 2359만 원을 2회에 걸쳐 실시된 워크숍 개최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평가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8527만 원의 용역비로 역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국민의 정부 5년에 대한 평가사업'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었으며 이 사업은 원래 정부평가업무를 위하여 설립한 정책평가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외부 연구용역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 집행도 용역비의 91.5%에 해당하는 7843만 원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는 당초 12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66.5%에 불과한 7억 98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임의전용하거나 또는 불용처리한바 적정한 예산 산정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집행문제입니다.

2002년도 국외여비예산은 3억 7189만 원을 계상하여 69.5%인 2억 5853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원래 계획했던 국제회의 참가보다는 해외연구소의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 성격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업의 재원을 전용받아 추가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기획단 운영사업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중남미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조사 경비에 지원하고, 기후변화협약대책추진사업의 경우도 업무와 무관한 업무유공자 12명의 금강산연수 여비에 지원하고 있는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금예산 과다계상문제입니다.

사례금예산으로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여 25%에 해당하는 4276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재원 중 8905만 원은 별도 전용절차 없이 규제개혁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규제현장 조사요원 사례금 7650만 원도 전액 불용하고 있는바 내년 예산부터는 동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비서실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예산이 75억 1003만 원이었던바 예산이 과다편성되거나 향후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한외빈 접대행사비 과다계상입니다.

방한외빈 접대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1억 7100만 원의 예산 중 2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대비 집행비율도 평균 18.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관 대수선공사의 전용문제입니다.

총리공관 대수선을 위한 당초 예산은 9100만원이었으나 이월과 전용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총 8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67%나 증가한 2억 4300만 원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고 있고 매년 이들 경비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점에서 볼 때 이들 과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68억 9623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인건비 과다편성입니다.

9명에 불과한 전문위원 인건비로 2001년에는 77.2%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타 분야에 전용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역시 75.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추계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활동비에 예산의 정비 필요성입니다.

고충처리 민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고충민원조사활동비, 고충민원처리활동비, 고충민원조사특수활동비, 고충사안조사활동비를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비는 각각 예산과목에 부합되게 편성 및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민제안 등 광고료 집행 부적정문제입니다.

국민제안 및 위원회 홍보예산으로 3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중 2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료예산에서 2636만 원이 집행된 홈페이지개선사업의 경우 이미 기본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동 예산은 같은 관서운영비 내 다른 세목으로 집행하고 대신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광고료 예산에서 홈페이지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홍보업무관련특근매식비의 경우도 기관운영 기본사업예산에 기 반영된 9012만 원에 추가하여 소비성 경비인 특근매식비로 전환 집행하고 있으며,

또 창립 8주년 세미나 및 직원연찬회 경비를 광고료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바 적정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연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유해환경정화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사업 및 주류전문소매점제도입사업의 경우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나 이 예산들을 별도의 전용 없이 이 사업들과 관련 없는 청소년보호단축마라톤행사에 집행하고, 주류전문소매점제도입사업예산도 전용 등의 조치 없이 학교폭력 예방관련 자료 제작 등의 경비에 집행하였는바 이러한 예산집행 관행은 향후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되어 54개 시민단체에 5억 167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 단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중 지역사회분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나 가급적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은 배제하고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지원사업 중 연극제나 대토론회, 정책토론회 등과 같은 행사성 사업 및 토론회는 청소년유해환경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음란폭력매체물추방사업의 경우도 관서운영비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54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중 일부경비는 청소년단축마라톤대회 행사경비와 같은 동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들에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치료재활프로그램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상되어 있었으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방향 등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예산집행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기획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두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과학화사업 집행에 있어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정보화사업은 타 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전시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5940만 원을 인건비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 조치하였고, 방화벽용 암호장비인 보안장비는 을지연습정보화용역비에서 267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38억 2821만 원보다 235.3%가 증가한 90억 898만 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2001년 4월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당초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고액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2년 세입예산 추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도 2000년에 6억 원, 2001년에 16억 원, 2002년에 53억 원으로 매년 그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원 가운데 61억 원을 집행하고 10억 436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관서운영비에서 2억 원과 IBRD 전대차관원리금 상환액 가운데 금리 하락으로 이자납부액 가운데 7억 8711만 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관서운영비가 해마다 과다 편성되어 매년 인건비와 여비로 전용하고 있는바, 내년 예산심의 시에는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수입료도 1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799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으며 인쇄관련 관서운영비도 총 2억 3971만 원 가운데 40.5%에 해당하는 9705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타 비목으로 전용이 용이한 관서운영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검토 시 조정·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개 연구회 및 42개 소관 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17.9%가 증가한 6719억 원이며 차기 이월규모는 839억 500만 원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기관의 출연사업비 과다이월문제입니다.

정부출연사업 중 20% 이상 과다이월 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해 보면 기초기술연구회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11개 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33.2%에 불과하고 나머지 355억 9100만 원은 이월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회소관 연구기관의 경우도 9개 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39.3%에 불과하고 8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기술연구회소관 연구기관의 경우는 12개 사업에 52.9%의 집행률을 보여 203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이 대규모의 예산이 연구기관에서 적기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으로 운용됨에 따라 2002년도의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기관별로 최하 8400만 원부터 125억 4700만 원까지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한바, 과학기술계 20개 연구기관의 총 이자수입액은 327억 9800만 원으로 연구기관당 평균 이자수입액은 16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은 경영개선을 통한 수입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능률성과급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사업자금 이자발생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의 차년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충당금 미확보 문제입니다.

2002년도에 퇴직금 적립률이 100% 미만인 기관은 총 42개 기관 중 19개 기관인 바, 대부분 부족한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적립률이 낮은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여성개발연구원 등은 향후 10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는 퇴직적립금이 2.1%에 불과하여 적립계획 자체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들 기관들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퇴직금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성과금도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사기 저하로 유능한 인재의 이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탁용역수입의 과소 계상문제입니다.

경제 및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원의 수탁용역수입예산 대비 수탁용역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연구기관은 7개 기관이고 증감률이 100% 이상인 연구기관은 환경정책연구평가원을 비롯해 모두 8개 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수탁용역수입을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출연금 배정 시 수탁용역수입이 많을 경우, 출연금 배정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초과수입의 발생분을 수입대응지출로 집행할 경우에 예산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한 수탁예산수입을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토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의 과다한 이월문제입니다.

2002년도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차입금 상환사업의 예산현액이 193억 원이었습니다. 130억 1900만 원만 집행되어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6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2년도에 매년 19억~25억 원의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사업에 있어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면 이월액 발생분에 대한 해당 재원을 당해연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유발되게 됩니다.

향후 차입금 상환 예산의 편성 시에는 국회가 차입금 상환의 적정소요를 산정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다 이월문제를 해결하도록 동 예산규모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개별 연구기관의 결산상 문제점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2년도 국무총리소관 기타 예비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17억 6652만 원과 국무총리비서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비상기획위원회의 봉급 조정 수당으로 8437만 원을 지출·배정하였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9쪽부터 190쪽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在昌 수고했습니다.

이상 정부 보고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정부 측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과 방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의의 경우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식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전체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간사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미리 위원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安大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질의에 앞서 이번 태풍문제에 대해 잠깐 짚고 나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쪽에 보면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 현안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安大崙 委員 지금 태풍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마는……

○安大崙 委員 그러니까 탁상공론했다 이것이지요. 지금의 이 피해는 전 국민이 매년 똑같이 받

복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은 용두사미격으로 항상 표현만 하고 사라집니다.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산의 경우에도 어처구니없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태풍 대응요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송전탑 붕괴로 인해 올 초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보장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해대책위 위원으로 몇 년 간 활동한 경험을 살펴보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그다음에 매년 수해지구 다 태풍이다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은 일정하게 똑같 습니다. 금번에도 TV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비디오를 복사해서 보는가 할 정도였 습니다.

이 문제는 통일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문 제 때문이 아니냐, 예를 들면 지난 2월 대구지하 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통일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표현했 습니다마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 하나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애드벌룬 을 띄워 가지고 ‘통일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갖 추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실현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현 정부도 과거 정 부와 똑같이 매년 행사처럼 해 오듯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행동이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安 위원님이 지적해 주 시는 문제는 나름대로 받겠습니다마는 정부 나름 대로 지난 9월 8일자로 해서 행자부 중앙재해대 책본부에서는 추석 연휴 때 귀향객들의 이동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태풍……

○**安大崙 委員** 본 위원은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었느냐, 실현성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했을

때 전무했다, 모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만 사후약방문식으 로 피해복구비니 뭐니 해서 떠들어 댄다,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표현만 그렇게 해 오 고 현실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여 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엇인가 강구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연 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일 피해가 컸고, 또 바람이 워낙 세서 피해가 크기는 컸습니다.

○**安大崙 委員** 사후약방문식입니다마는 앞으로 보상을 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상금액 책정 과 지급과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1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들 예비비 잔액이 1 조 1800억 원이었습니다.

○**安大崙 委員** 루사 때는 재해 복구를 하기 위 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4조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실무자들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國務調整室水質改善企劃團副團長 兪宗相** 7조 정도 됩니다.

○**安大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를 어떻게 각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균형예산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맞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현재 집계된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 지고 있는 재원은 재해대책예비비 잔액 1조 1800 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총칙에 보면 국고채 무부담행위로 수해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 이 1조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좋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것이지 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安大崙 委員** 국정감사 때 더 심도 있는 질의 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정예산에서 대체 가능한 것 인지를……

○**安大崙 委員** 하여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넓어지는데 농작물 피해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3%~6%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는 인재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보상금을 떼어먹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심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가려고 자꾸 어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금년에는 정말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예산 때마다 닦치는 일이지만 과도한 전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시에도 국무조정실의 과도한 전용액 발생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200억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전용되었습니다. 사업의 변경에 따른 전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해도 국무조정실은 2001년도에 300억 이상이고 2002년도에도 20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숫자를 가지고 보면 작년도에 200억 원에 가까운 전용이 있었던 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이관에 따라 발생한 것이 18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에 나머지 13억 원이 있는데 이 13억 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작년 초, 즉 연도 중에 개청되어 그 경비를 기정예산에서 전용해 쓰는 바람에 9억이 들어갔습니다.

○**安大崙 委員** 하여튼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커요. 전용을 통한 과도하고 변칙적인 예산 집행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 제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연구용역 예산이 23억 3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39.9%인 9억 3335만 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이 연구용역비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60% 이상을 전용·이월·불용처리하였다는 것은 연구용역 예산의 편성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구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간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실장께서는 연구용역비 편성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安 위원님, 저희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용역비 예산이 작년도에 23억 원이었습니다. 23억 중에 19억은 연구용역비로 쓰고요. 3억 7000만 원이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었습니다.

○**安大崙 委員** 아니, 그 중에 9억 7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이월이 9억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쓰기는 쓴 것이지요. 쓴 그 집행을……

○**安大崙 委員** 물론 쓰는 것이겠지요. 이월이 되었고……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연구용역비로 쓰기는 다 쓰는 것이지요.

○**安大崙 委員** 그리고 3억 3000만 원이……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3억 7000만 원이……

○**安大崙 委員** 내 데이터는 3억 3300만 원이네요. 타 분야로 전용되었고, 그렇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3억 7000만 원입니다.

○**安大崙 委員** 3억 7000만 원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安大崙 委員** 그러면 더 불어나는 것이지요. 타 분야에 전용되었고, 9억 4650만 원이 불용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집행은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39.9%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 중에서 이월이 많이 생긴 것은 하반기에 가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하는 바람에 연도 내에 다 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安大崙 委員** 이월이 되었다는 것도 결국은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실제 집행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되더라도 아주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에 당초에는 여객과 화물운송역의 합리적 확정 방안,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 등 10건의 연구용역비에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집행은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 연구 등 6건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고, 당초 계획된 연구용역과제 중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정책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의 질의를 참고해서 이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체크하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진지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도 안 할 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의 모양이 자꾸만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연구용역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비상기획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을지연습과학화사업과 관련해서 비상기획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조금 자료를……

○**安大崙 委員** 전용했지요?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자산취득비 한 5600만 원……

○**安大崙 委員**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과학화사업은 포기한 것입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그렇지 않습니다.

○**安大崙 委員**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예.

○**安大崙 委員** 그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 집행을 하고 자체 조금……

○**安大崙 委員** 아니, 이 지침서에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내부규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즉흥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례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예, 알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바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 정보화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타 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서버구입비와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전액 다 비목으로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을지연습과학화사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安大崙 委員** 그렇지 않은데 다 써 버리고 돈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건비로 전용하면서 그만큼을 용역비에서 보안장비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 정도면 내가 질의할 게 많아요.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예, 알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그리고 청소년 보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인터넷 발달과 청소년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의 폐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맞습니다.

○**安大崙 委員** 여기서 여러 가지 추잡하고 정말 낮 뜨거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비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꿈나무들인데 앞으로 나라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한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알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安大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性憲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性憲 委員** 한나라당의 李性憲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피해를 당한 농민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연재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결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4월에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것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요약본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그렇습니다.

○**李性憲 委員** 서문은 읽어 보셨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요약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李性憲 委員** 제가 서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사전 예방적인 방재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인식 없이 추진된 개발과 건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농경지를 개발하기 위해 폭을 좁힌 하천 부분에는 여김없이 제방이 터지고……’ 즉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정부가 쏟고 있는 노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결국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상예보 또 산림·하천·제방·댐 등 치산치수대책, 도로·교량·철교·절개지 등 시설물 안전대책 또 네 번째로 하수관리·유수지·배수펌프장 등 배수관리대책 또 저지대 주민 등을 위한 신속한 경보 및 대피체계의 구축 그리고 긴급구난 및 복구계획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 등 각 계층별 교육훈련 및 홍보대책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모든 관계자가 협의하여 수립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제대로 된 외양간을 만들 수 있고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가지의 주된 방재체계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요약보고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상예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기상예보 그 부분은 제가 좀……

○**李性憲 委員**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李性憲 委員**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기상예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기상관측체계부터 시작해서 기상관측요원들 또 분석하는 내용들 모든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난 4월 감사원 보고서이니까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를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해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재해연보’가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사이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연 평균 106명의 인명 손실과 1만 4678명의 이재민, 680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98년 이후에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나 규모가 커지고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2년도 태풍 라마손과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270명의 인명 피해와 6조 1153억의 재산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한 해의 피해가 그 이전 10년간의 피해와 맞먹을 정도로 피해가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2002년 11월 2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수해방지대책기획단과 감사원 감사결과와 감사원이 지적한 특별대책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감사원과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 수방기획단에서 작년도 루사를 비롯한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소요액에 총 9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 우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시설물들에 대한 복구를 완공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독려를 하고, 불가피하게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장대교량이라든지 펌프장 이런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기 전에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비나 태풍이 오더라도 다시 그러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독려를 하는 한편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수해방지대책을 10개년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수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

○**李性憲 委員**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원 통보사항 같은 경우는 사후결과를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李性憲 委員** 그러면 실제로 4월에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무조정실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통보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가 지난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 재난 및 재해 관리업무 총괄조정체계가 미비하다고 해서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李性憲 委員** 그 안도 이번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서둘러서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연초부터 기획단에서……

○**李性憲 委員** 제가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답변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알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이것을 미리 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도 있고 또 시정하도록 통보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는 거

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태풍 매미가 몰고 간 이후의 대책 부분들은 대체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재탕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비교적 소상히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기본급 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즉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대체로 별도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급 부족을 이유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2003년 8월 현재 158명 정원에 171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일부 과원이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니까 정원은 158명인데……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원이 170명입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초과된 사유가 예를 들면 월드컵지원단에 파견을 나가거나 제주 개발기획단에 파견을 나가거나 했을 때 임무가 종료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그런 경우에는 정원 초과가 인정이 됩니다. 해소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李性憲 委員**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도 33명, 2001년도에도 36명, 2002년도에도 27명의 별도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그렇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매년 예산을 전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승진도 동결이 되고 저것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조직 밖으로 파견 나갔다가 임무가 종료되어서 돌아올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李性憲 委員** 아니,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매년 평균 30명 이상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2002년도 기본급 예산 중에서도 7.63%가 전용되거나 불용된 것은 국무조정실소관 기관의 2002년도 결산 평균 전용률 2.9%의 거의 2.6배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 부분은 단순히 대규모 전용과 불용이 생긴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하려고 그러면 국회 예산권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파견이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李性憲 委員** 이 부분도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서운영비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부족한 예산의 전용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해마다 의례적으로 전용을 해 가는 비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용을 해 주는 비목, 저도 예산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李性憲 委員**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가 차제에 한번 전부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약속을 하셨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李性憲 委員**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차원에서 예산항목 부분이 상당히 넘나들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용역사업의 예산집행 부분에서 애초에 연구용역사업으로 잡았던 항목하고 실제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하고 몇 %나 일치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10개 연구과제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몇 개의 과제를 그대로 수행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재 10개 과제의 예산을 편성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자세하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李性憲 委員** 아니,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예산 배정 시에 기본적으로 주제를 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제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50% 일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연구과제 선정된 것과 실제로 발주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단 한 건도 일치한 것이 없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지요.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의 사업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李性憲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경우에 그것도 그대로 넘어갑니까?

특별히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 연구’ 이 부분은 연구비 규모에 비해서 그 내용이 형편없이 부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수의계약해서 일을 하도록 해 주고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도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앞으로 그러한 일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李性憲 委員** 다시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 거기에 적절하게 제재를 해야 그러한 부실한 리포트가 안 나올 것입니다.

국외여비 초과 지출 및 계획에 없던 국외여행 실행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사례금 예산의 과대 계상 및 불법 전용의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관 대수선 공사비 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총리공관 대수선을 위한 2002년도 예산은 9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억 2000만 원과 전용액 2억 4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8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300만 원이나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

무총리비서실 예산이 방만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절약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런데 실제로 2001년도 당초 계획에 따르면 삼청당 건축공사비가 1억 5674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2002년도 세부 집행결과를 보면 3억 42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억 8596만 원이 더 들어간 까닭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원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리 몰랐던 것을 발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李性憲 委員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면 예산 뭐 하러 짭니까?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李性憲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알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2002년도 금감원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 금감원 결산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생보사 상장 관련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매년 반복되는 전문계약직 인건비 과다편성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李性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 중에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문제 때문에 조정실장한테 많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 국회에서 국회 결의로 정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8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작년 루사 태풍 후에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부

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작년 8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것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委員長 李在昌 아까 李性憲 위원 질의 때 나온 감사원의 그것은 감사원 자체에서 한 것이고, 정부 단위의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것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출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것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수 있어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朴柱宣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朴柱宣 委員 오늘이 세입·세출 결산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공무원 정원과 직제에 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차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표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 일이 있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朴柱宣 委員 그런데 차장제는 거둬들이고 수석조정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朴柱宣 委員 왜 그렇게 한 것이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차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무조정실 내의 업무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수석조정관제도로 하기로 그렇게 정부 내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지금 보조기관의 설치, 직제에 대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석조정관제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정부 직제……

○朴柱宣 委員 국무조정실 직제를 개정한 것이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수석조정관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차관급입니다.

○**朴柱宣 委員** 정무직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정무직입니다.
 ○**朴柱宣 委員**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장·차관을 제외한, 정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기관은 1급에서부터 직급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관급을 직제 개정으로 그렇게 2개나 신설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내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처를 비롯해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한 끝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거기에 따라서 직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朴柱宣 委員** 그렇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입장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령만 개정하게 되면 장관급도 신설할 수 있네요. 수없이 신설할 수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柱宣 委員** 정부조직법 제2조3항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은 되어 있지만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부처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물론 趙泳澤 기획수석조정관이나 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개인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잘 오셨는데 적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직위가 충원되고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차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것을 거둬들이고 편법을 이용해서 차관급을 2개나 신설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검토했다면 관계 서류를 주세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朴柱宣 委員** 그다음에 지금 태풍 매미의 우리나라 상륙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장관회의가 몇 회 개최되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지난 연휴 중에 두 번 했습니다.
 ○**朴柱宣 委員** 국무조정실장도 거기에 참여하셨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참석했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관계장관회의의 참석 멤버가 어떤 분들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추석 바로 다음날 회의를 소집했는데 총리께서 연휴기간 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만 참석하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 첫날 농림부·해양수산부·건교부·행자부하고 저희 총리님하고 총리 보좌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보건복지부·국방부·기획예산처 이런 분들이 오고……
 ○**朴柱宣 委員**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태풍 매미가 12일 오후 4시에 제주도에 상륙했고 12일 오후 8시에 경남 삼천포 부근 해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미의 북상과 관련된 보도가 여러 번 있었고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는데 아무리 추석 연휴라고 하지만 12일 오전 10시에야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우리나라 상륙시간 6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대책을 제대로만 마련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 9월 8일에 태풍이 예고가 되자마자 각 지방에다가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을 시달렸고요. 9월 11일부터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12일과 13일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사전에 정부에서 9월 9일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면 굳이 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아니요, 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행자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朴柱宣 委員** 그러면 왜 장관회의를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이미 시·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관계장관회의를 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태풍 규모가 크고 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조할 사항이 있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요.
 ○**朴柱宣 委員** 그래서 지금 태풍이 상륙하기 6시간 전에야 관계장관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행자·농림·건교·해수부장관하고 국무조정실장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관계 장관들을 참석해 달

라고 통보한 것이 이 네 분의 장관밖에, 그 외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
다. 그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자부 내에 설
치되어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면 열몇 개
기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朴柱宣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루사 때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는 어떤 분들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잘……

○朴柱宣 委員 실무자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작년 루사 태풍과 관련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할 때에도 행자·농림·건교·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만 참석했는지 그 외에 다른 행정부
처의 장도 참석했는지요.

이 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이 태풍에 대비한 예방
업무를 다루기도 하고 태풍이 있으면 바라지는
않지만 부득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
복구에 대한 신속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
의 관계장관회의의 소집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러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장관이 이
네 분 이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래서 그 다음날 회의
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보건복지·기획
예산처 이런 장관들을 추가로……

○朴柱宣 委員 13일 회의에서 그랬다는 말이지
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13일 회의에 경제부총리
는 참석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때 저희가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朴柱宣 委員 왜 안 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쪽까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이지요.

○朴柱宣 委員 아니,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필요
가 없어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朴柱宣 委員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가 건의드리고 총리
님이 판단하십니다.

○朴柱宣 委員 국무조정실장이 건의합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재경부장관은 전혀 필요
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총체적인 재정운
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분인데 필요가
없어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예산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부총리까지는 생각
을 안 했던 것입니다.

○朴柱宣 委員 참석할 필요가 없어서 통보를 안
한 것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하여튼 저희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朴柱宣 委員 이것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
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지 않습니다.

○朴柱宣 委員 일체 통보한 사실이 없었어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없었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면 작년 루사 태풍과 관련된
대책회의에서도 전혀 참석 안 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지난해 루사 대책과 관련해서는
참석을 했다면 금년도에 참석 안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을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부총리가 그날 회의에 참석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피해 복구에 대응하
는 정부의 의지나 방침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러니까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정부로서는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다고
대답하는 것하고 참석대상 각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하는 것하고
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재경부장관 입
장에서 총리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라고 한다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재경부
장관의 입장에서 참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까?

재경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아닙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아닙니다.

○朴柱宣 委員 이번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대
규모 태풍이 와 가지고 또 홍수로 인해서 국가
안전시설물이 많이 파괴가 되고 손해가 많이 생
겼는데 그 중에는 홍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컸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항 부두 크레인이 붕괴되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남강댐, 대청댐 등 설계홍수량 초과가 이미 2002년도에 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대암댐을 비롯한 7개의 댐이 설계홍수량 초과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동안 설계를 했던 댐 공사에 있어서의 홍수조절 용량이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태풍이나 홍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시설 기준이 다소 낮았다는 측면이 있는데 가능최대강수량인 PMP 기준을 높여서 기준에 완공된 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기준에 맞게 공사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도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루사 피해를 겪고 나서 일부 시설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피해를 입고 보니까 그때 보완한 기준이 좀더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래서 국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기준을 점검해 가지고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점검을 신속히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그리고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내일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는데 그 입법이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때 재난관리법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화물연대사태가 생기고 나서 그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정부가 인력이나 물자·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朴柱宣 委員**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 시 '6월 30일까지는 재난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 30일이 지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만약 소방방재청이 설치되었다면 매미 태풍의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계량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부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 내에서 또는 전문가들과 점검토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柱宣 委員** 이번 매미 태풍의 학습효과를 살려서 앞으로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委員長 李在昌** 朴柱宣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允式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式 委員**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작년 루사 태풍 후 9월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항구적인·국가적인 재난관리대책기구 설치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를 가동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 포스가 가동되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재 국무조정실 안에 수해방지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金允式 委員** 최근 대책으로 소방방재청 설립안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더 촉진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무조정실 태스크 포스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동안 각종 재해나 재난 사고들로 인해서 연초부터 '소방방재청'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또 '재난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金允式 委員** 범부처적으로 참여하면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것도 검토했는데 현재 행자부 안에 민방위재난본부가 있고, 소방기능도 행자부 안에 있고, 또 일부 집행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행정업무를 바로 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행자부 안에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金允式 委員**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와 같

이 태풍 매미가 지나갔지만 일본의 경우는 사상자 1명, 부상 90명으로 아주 경미한 피해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비에 소홀했다, 인체의 성격이 크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계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피해가 큰 마산의 경우 주민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사실상 부산시에서 대피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철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마산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원목과 같은 루스 카고(loose cargo)를 방치해서 피해가 더 커졌는데 주민에 대한 대피령을 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까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가마는 이번 매미 태풍을 계기로 앞으로 해일이 강하게 올 때나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允式 委員** 현재 행정자치부 내규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규정을 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이번 매미의 경우는 지금까지 피해가 가장 컸다는 사라호 태풍보다 풍속이 훨씬 높고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사전에 예상되었는데, 특히 사라호 태풍의 피해가 컸던 부산·마산 등 남부지역에서, 마산의 경우는 대피령도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라호 태풍의 경우는 낙동강하구언의 방파제까지 전부 유실되었던 큰 태풍이었는데 대비가 너무나 안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반복되는 주택이나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코드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축코드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법규 개정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예산 7억 4000만 원이

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세부용역 예산인데 아까 이것이 이월된 이유가 용역사를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왜 용역사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중문의 주거휴양단지에 대한 용역 조사와 관련, 용역사가 선정되지 않아 이월시킨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와 관련, 물류·금융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경제특구를 만들고 있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도를 모델로 삼았던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이미 JonesLangLaSalle사에서 100만 불의 비용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이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 많은 개발붐이 일고 있고 많은 펜션의 건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 유치라든지, 싱가포르나 자산관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단에서 임의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예산은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로 이관시켜서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가 그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자 선정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로는 이월됐지만 지금 으로서는 이월되어 가지고 계약이 다 돼서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계약자 선정이 됐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됐습니다.

○**金允式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집행을……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이월한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계약할 것을 금년에 와서 계약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알겠습니다.

또한 인천 영종도·송도 경제특구법이 8월 6일자로 발효됐는데 제주자유도시법은 인천 경제특구법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

니다. 여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제주자유도시법도 여기에 준해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또 인천 경제특구는 왜 재정부 산하에 추진기획단이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각 차원에서의 간사 부서는 재정부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李在昌 위원장, 嚴虎聲 간사와 사회교대)

○**金允式 委員** 그러나 경제특구라든지 제주자유도시에 관한 것은 각 부처를 통할·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경제특구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더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재정부 산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낭비요소가 크니까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지금 현재 3대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가 균형발전, 정부 혁신 및 지방 분권에 대한 것은 물론 청와대가 직접 관리합니다마는 거기에 내각 차원에서의 간사 역할을 하는 부서는 각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의 경우에는 재정부, 국가 균형발전의 경우에는 산자부, 정부 혁신 쪽은 행자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金允式 委員** 물론 특구라는 것은 우리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 3권도 제약되는 아주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라든지 많은 제약을 푸는 데는 재정부의 파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인천 경제특구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기획단은 재정부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토론하셔서…… 통합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일부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을지연습을 통해서 과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동타격대 개념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최소화 내지…… 궁극적으로는 철군했을 경우에도 미군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첫 시도로 오키나와 미군의 한국 상륙작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입장에서, 군사전략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문제를 미국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서 아무 협상카드 없이 이렇게 쉽게 내 주었을 때 과연 한국의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우리의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임무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지만……

○**金允式 委員**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제가 개인적으로 학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난 7월인가 미국의 전문가 들하고 장시간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 입장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배치 문제라든지 스트라이크 포스(Strike Force)가 한국에 급파되는 문제는 상당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고점단 국방기술이 현대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결과로서 2사단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允式 委員**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이 처한 입장은 이라크 전쟁과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은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라든지 스트라이크 포스(Strike Force)가 출동해서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라든지 휴전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더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미 해병의 남해안 상륙작전이 있었지요?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예.

○**金允式 委員** 이렇게 22시간 이내에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개념으로 과연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물론 비상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차피 을지연습이 다 이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총괄적인 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논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지상포 사격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것이 다 공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기술

로서 대포대 사격이 가능한가 그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거기서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포가 사격하기 위해서는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1, 2분 동안 대포대 정보를 수집해서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여운을 남기고 저희들이 토론을 끝낸 적이 있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군이 세계전략 속에서 한반도를 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전략에 상당한 로직(logic)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金允式 委員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국무조정실도 있고…… 최근에 우리 경제가 참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제대토론회를 가졌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뭐니까? 각 경제주체가 최대한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의 직접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은 경제외적인, 안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지만 외국 투자도 활성화되고 내국 기업도 투자 또 소비심리까지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각 부처가 소관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외적인 것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할·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嚴虎聲 金允式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朴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錫 委員 공공기술연구회의 朴炳權 이사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해양연구원의 卞相慶 원장께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술연구회 朴炳權 이사장님께 묻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서해안해연구기지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라는 곳에 무인도인 선갑도 65만 평을 구입한 적이 있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 구입비용이 48억이었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예, 그렇습니다.

○朴炳錫 委員 총 사업비 174억 중에 96년, 97년 2년 동안에 걸쳐서 5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48억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무인도인 선갑도를 48억 원에 매입했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예, 그렇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런데 당초 계획은 서해안의 모든 해양문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이었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런데 97년에 토지 매입이 끝났는데 사업이 포기가 됐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예산의…… 그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朴炳錫 委員 제가 한마디씩 묻겠습니다.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예산 지원이 안됐습니다.

○朴炳錫 委員 97년 토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에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이 땅을 되팔기로 결정했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됐고, 오랫동안 본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많은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매각하도록 의결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다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것은, 우선 부지 매입 계약을 한 것이 96년 6월 27일인데 그 3개월 전인 96년 4월 1일에 무인도 출입이 가장 좋은 지역에 한 개인이 어업권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무인도는 그 어업권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우선 이 문제에 국한시켜서 보면 48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인도를 매입했는데 그 3개월 전에 개인이 출입이 가장 좋은 지역에 어업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해양연구원이 이 땅을 매입하면서 3개월 전에 어업권이 신청돼서 허가받은지 모르고 이 땅을 구입했다는 점에서 우선 행정상의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48억 원이 투입됐는데 7년이 지나도 록 매각이 안 됩니다. 즉,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는데 7년간 매각이 안 됨으로써 막대한 국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과연 어업권 때문에만 이렇게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지요.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해양연구원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96년, 金泳三 대통령 문민정부 시절에 관계 장관으로부터 이 무인도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까?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朴炳錫 委員 그 얘기만 우선 간단히 해 주세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선갑도의 구입은 처음에는 정부가 특수목적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해양연구소로 하여금 서해안 해양연구를 위해서 쓰도록 예산이 배정되고 해양연구소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지금 朴 이사장님이 표현하신 ‘정부가 특수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폐기물 적재장소로서 정부가 해양연구원에 이 땅을 구입하도록 의뢰한 것이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처음에 해양연구소에 의뢰된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해양연구소에서 구입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자, 그 땅의 본래 용도는 해양연구원보다는 원전 폐기물의 적재장소였다는 것은 맞습니까?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원래 처음 정부가 계획했던 목적은 그렇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런데 이 땅을 구입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인도를 매입하게 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은 장관의 지인으로부터 무인도를 사게 된 거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과학기술부가 그 업무를 주관했는데 주관하는 과정의 의사결정은 저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이후에 그 땅을 해양연구소가 활용하도록 해양연구소와 정부가 얘기가 있어서 해양연구소가 예산 배정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金泳三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에 정부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선갑도를 원전 폐기물 장소로 내정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구입시킨 이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인도를 한국해양연구원이 대신 사주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한 거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대체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朴炳錫 委員 그런데 해양연구원이 이 땅을 구입한 시점이 96년 6월 27일인데 그 3개월 전에 65만 평에 달하는 선갑도의 입출입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 어떤 개인이 어업권을 갑자기 신청함으로써 그 어업권을 보상해 주지 않는 한 국비 48억이 투입된 65만 평의 무인도가 쓸모없는 땅으로 판정이 났고 따라서 정부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입찰을 거쳤지만 모두 유찰됐지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어업권을 신청해서 획득하는 일하고 땅을 구입하는 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朴炳錫 委員 자,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부가 무인도인 선갑도, 이게 굴업도 근처에 있는 겁니까?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예, 그 남쪽에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원전 폐기물 장소로 예정했다가 왜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나요?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일단 굴업도로 옮기게 되었는데 굴업도가 다시 중지되어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러면 원전 폐기물 장소로 구입했다가 안 되니까 한국해양연구원에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연구지로 사용하라.” 선은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까?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목적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매입할 때부터 원전 폐기물 적재장소가 목적이었는데 구입하고 조사해 보니까 적지가 아니어서 팔게 된 것 아닙니까?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아닙니다.

처음에 정부가 그 땅이 필요해서 특수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한국해양연구원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3자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朴炳錫 委員**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金泳三 대통령 정부 시절, 인천광역시 선감도를 원전 폐기물 유치장소로 내정하고 당시 주무장관의 친지로 하여금 그 땅을 매입하게 한 다음,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국해양연구원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이 정식계약을 하기 3개월 전, 어떤 개인이 유일한 출입구인 데다가 어업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선감도는 당초에 원전 폐기물 장소로도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이 그다음 목적으로 내세운 서해안의 제반 해양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기지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만 48억, 총 58억이 투입되는데 58억이 투입된 선감도 무인도는 국비만 낭비한 채 현재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이 옹진군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팔지도 못하고 계속 소유하면서 세금만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돼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장관의 지인이 매입한 땅을 한국해양연구원이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사면서 불과 3개월 전에 어업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인가, 또 50여 억 원이 투입되지 7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은 되팔지도 못하는 것이 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케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지요.

○**公共技術硏究會理事長 朴炳權**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장관님의 친지는 아니고 과기부의 고위간부가 소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의 말씀이 언론기관에 그대로 배포됐을 때 해당 장관님이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한국해양연구원은 실제로 65만여 평에 해당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 어업권이 설정되지, 섬 전체에 어업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을 이용해서 서해안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임해기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예산 지원이 현재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虎聲 간사, 李在昌 위원장과 사회교대)

○**朴炳錫 委員** 우선 96년 당시의 과기부장관은 누구십니까?

○**公共技術硏究會理事長 朴炳權** 金容鎭 장관님이십니다.

○**朴炳錫 委員** 장관의 친지가 아니라 과기부 고위간부의 명의로 샀다는 것입니까?

○**公共技術硏究會理事長 朴炳權** 고위간부의 친지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선감도 지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한 곳이 바로 어업권을 신청한 곳입니다. 산 위, 무인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차단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어업권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인도가 되면 부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두가 될 만한 자리에다 어업권을 신청했다는 것은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누가, 어떤 경위로 이 어업권을 샀는가도 차체에 밝혀야 될 문제이고, 50여 억 원 이상의 국비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례라고 지적을 합니다.

○**公共技術硏究會理事長 朴炳權**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朴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文洙 委員** 결산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단장은 누구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실무책임자로는 누가 가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국장급이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제가 수해방지대책기획단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각 부처별로 수해 방지 또는 재난 방지에 대한 총괄기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청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행자부 산하에서 얼마나 많은 총괄기능을 하겠느냐,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정부 각 부처 간에 총괄기능 자체를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집행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또 수재의연금을 내더라도 이것이 언제 전달될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주 높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느냐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재의연금이라든지 성금 전달이 늦은 것은 물론, 아무리 예비비를 1조다 얼마다 내놓아도 결국 또 관에 가서 그것을 설계하고 심사하다 보면 1년 한바퀴 돌아가지고 또 덮어쓰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 집행 지연을 개선하는 방안, 수재와 관련된 각종 성금을 국민들이 내기는 금방금방 내요. 텔레비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운트는 그때그때 올라가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1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왜 이것을 못 고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상습 수해지역, 상습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 올라와서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지하실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건축법이나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하실이 계속 침수돼서 사망자가 나오면 상습 피해지역은 상시 주거를 금하고 다른 것을 한다든지, 또 기왕에 있는 것은 몰라도 신축할 때 반영해 준다든지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노래방이나 술집 같이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기에 경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경보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사망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을 일정 부분 피해보는 것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상습 피해지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래서 국민들이 좀 달라진다, 한 개라도 해결된다는 이런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하고 부서도 작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례적으로 자의적인 불법행위, 예산회계법상의 법률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목적 외에 타 사업에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인정합니다.

○**金文洙 委員** 물론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이것은 청소년정책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해서 계속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이전

의 유해환경 중에서는 업소나 약물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작년과 올해 인터넷이 굉장히 심각한 유해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그쪽에다 더 투입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예산편성은 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쓸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은 전용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앞으로는 밟아서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급변하는 것이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재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물론 선의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급하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정에 따라 전용절차를 밟고,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해서 하셔야지 위원장님의 선의만 생각해서 막 쓰고 나면 나중에 결국 지적이 되어서 좋은 취지가 나쁘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모니터링 지원인데 이 사업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액수도 많지 않아요. 54개 시민단체에 5억 1679만 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저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면서 시민단체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례를 계속 반복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큰 득도 못 보면서 시민단체는 무엇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예산을 통해 우리가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지금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시다마는 저도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공정하고 엄정해야 되겠다, 자신들은 밥을 굶으면서도 시민운동한다고 그러는데 돈 몇 푼 가지고 마치 정치적인 편파성이나 있는 것처럼, 무슨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정부위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겼고 또 지금도 계속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정부위 지적은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도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그렇게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文洙 委員** 위원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정부 예산의 엄정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金振杓 부총리가 수재 때 골프를 쳤다, 골프 친 것이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뭐가 심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국민들의 정서로 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헌신성, 열정이 훼손된 측면에서 전 공무원들의 명예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민단체도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의지가 선하니까 기존의 법질서, 정부 예산회계의 구체적인 절차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여기십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저희가 매 건마다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을 저희 자문위원 중에서 위촉하다 보니까 한 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심사위원 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첫째, 중복지원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부처가 한 단체, 동일 사업을 중복지원한다, 중복지원해 봐야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중복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저희가 중복지원은 계속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위원장이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구체적으로 중복지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구체적인 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단체 중에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는 15개 단체가 8200만원, 2002년도에는 6개 단체가 7421만 원, 올해는 7개 단체가 7700만 원을 중복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는 필요하시면 내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 점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있을 때 반드시 시정하시라는 것입니다.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알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그 심사위원이 그 예산을 준다, 이것은 잘못이지요? 그것 지적받았지요?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金文洙 委員**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해 일단 국가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셔야 되겠지요?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金文洙 委員**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청하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지요?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제출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 왜 안 합니까?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글썬요, 제출이 왜 안 됐는지…… 저는 그것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金文洙 委員**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저는 아주 너그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법과 정부 예산의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정부기관의 공정성, 엄정성, 더구나 관련된 시민단체의 명예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예산과 여러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金文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富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富謙 委員** 金富謙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여러 가지로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가 대단하고 국민들이 많이 상심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현장을 시찰하시고 난 뒤에 특별재해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오늘 아침 9시부터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金富謙 委員**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매년 재난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복구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아마 국무조정실장님이 이것을 제일 답답하게 여기실 텐데 각 부처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위로한다고 방문을 해보면 제일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집행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매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물론 저희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일과 강풍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지원하기 전에 피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확인하고 나서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금 각 부처에다가 다시 주문해 놓고 있는 것이, 원래는 각 지방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그것을 다시 중앙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자면 열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지방에서 조사를 하고 예를 들면 현장을 사진에 담아라, 그러면 그것이 현장

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고 지방에서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부 지원을 줘라,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중에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각 지방에다가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때마다 결국은 현실적인 복구도 복구지만 그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정확하게 간파하셔서 그런 시스템, 신속한 지원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방방재청 문제가 나왔는데 국무조정실장님께서서는 소위 재난관리청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으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까 다마는 역시 소방의 기능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그쪽에서의 요구나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도 현실입니다. 소방의 기능을 더 강조하는 그런……

○**金富謙 委員** 오늘날 소방공무원들이 단순히 소방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재난업무에 보면 제일선 현장에 항상 소방공무원들이 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런데 이번에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실질적인 사기 양양을 위해서 요구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수 있는 자신들의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해서 좀 반발을 했고, 그것이 행자부의 인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마 金斗官 행자부장관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어필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왕에 소방방재청으로 이름까지 해 주었으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직 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재난에 관한 일반적인 공부를 시켜서 이분들이 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인사의 문제이고 또 그것을 미리 방침으로 정하기는 뭇한 문제라고 봅니다.

○**金富謙 委員** 아니,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

가가 시스템을 뜯어고쳤으면 그 시스템을 뜯어고친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지 소방방재청으로 해 놓고 소방공무원은 지금 행자부 소방본부장 수준에서 그대로 묶어 두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시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앞으로 실제로 청이 만들어지면 청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金富謙 委員**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富謙 委員** 이것 지금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하고 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습니다.

○**金富謙 委員**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지금 법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러면 국무조정실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내용은 대강 보고를 받았습시다.

○**金富謙 委員** 지금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사진을 찍고 화려한 자리에서는 소위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 설치고 고생은 소방공무원이 한나라는 것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라고 일부러 이름까지도 했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해주세요. 직역에 있어서 왜……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앞으로 만약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휘를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있는 공무원이든 다른 여타 공무원이든 적어도 재난 방재 및 거기에 대한 복구업무를 이분들에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지요. 지휘할 때 되면 전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헬리콥터 타고 와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재난 방재가 국민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 있으세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재난 관리에 있어서 소방의 기능이 중요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마는 지방의 소방업무까지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전부 지휘·통할, 관리·감독하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金富謙 委員** 조정실장님, 제 말씀의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아주 힘든 일이고 소위 공직사회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인사권을 일반 선출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제도적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왕에 소방방재청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재난 구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원화해서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침 라디오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한 실무자가 나와서 진행자의 몇 마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우리의 재난관리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어야지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무원 고생하는 것 알지만’ 이러시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서 뭔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국회 재해특위에 나와서 보고를 하시면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언론 및 ARS 등을 통해서 500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태풍 피해 복구에는 온 국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다 깃들여져야 의미가 있겠지만 글썽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얼마를 모금하겠다고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보면 성금 모금을 과도하게 하거나 너무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정해 놓고 성금 모금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도 과거 권위주의정부시대의 산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그거하면 더 견을 수도 있고 덜 견을 수도 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앓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뭐라고 할 것입니까? 정부가 있으면

서 이럴 때마다 준조세를 할당해서 기업마다 전부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표 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 줄 것입니까?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나오거나 할 때 적어도 앞으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녹여 낼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국무조정실 예산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1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래 계획했던 연구용역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전부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과제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파악하시기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이 아마 규제개혁위원회 쪽에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너무 디테일하게 했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 작년도에 다른 쪽으로 용역을 한 것은 작년이 지난번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당시 5년 동안의 규제정책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새 정부에 가서는 규제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점을 차제에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용역 예산을 돌려서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국무조정실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각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애기를 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해 봐도 이 부분만은 뭔가 답이 잘 안 나온다,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의 검토와 고민을 거쳐서도 답이 안 나

오는 그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했을 때 좋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신을 토대로 용역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감시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마는 원래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 중에는 여객과 화물운송역의 합리적 확정방안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제도 개선방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취소하고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정부가 조사하면 항상 잘한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학교의 다양성 제고방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때는 공직사회도 자기 스스로의 뼈를 깎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비서실장,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사업에 직접 관여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외빈접대비를 너무 안 썼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무총리께서는 외빈들이 오시면 가능한 한 피하십니까? 접대를 안 하세요?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접대는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金富謙 委員**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없으십니까? 외빈접대비 중에서 한 30%밖에 안 쓰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으신 것은 아니지요?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예, 그렇습니다.

○**金富謙 委員** 다른 데에서 혹시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그런 일은 없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희들도 보았습니다마는 국무총리공관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도 않던데 공관 수선비로 제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서 쓰시지 무엇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쓰셨습니까?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맞습니다. 원래 처음 설계단계부터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했겠습니까마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하다 보니까 좀 커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것보다도 제일 처음부터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제일 처음에 몇 억을 들여서 총리공관을 수선한다고 그러면 또 여론이 안 좋을까봐 이렇게 둘러댄, 편법을 쓴 것은 아닌가요?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받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국무총리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는다,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예.

○**金富謙 委員**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소소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기관장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변화하겠다는 의지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鎭出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林鎭出 委員** 한나라당 林鎭出 위원입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나오시지요.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金富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들이 대덕단지에 가면 우리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협조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장 여기 오셨어요? 원장 안 오셨지요?

○**人文社會研究會理事長 崔松和** 지금 해외 학회에 참석 중입니다.

○**林鎭出 委員** 7567만 원에 수행한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라는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人文社會研究會理事長 崔松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林鎭出 委員** 거기에 2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22명의 인건비로 44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비로 전체 용역비의 31%를 차지하는 2359만 원을 2회에 걸쳐 워크숍 개최비로 사

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이나 일반 용역을 받을 때는 보통 용역비의 10%를 넘지 못하는데 이것은 31%를 차지했습니다. 한 3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췌는데요. 2개월간의 연구기간 중에 22명의 인력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리고 인건비로 용역비의 59.1%를 과다하게 지출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췌 보겠습니다.

○人文社會研究會理事長 崔松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옳을 줄로 잘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올리기에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林鎮出 委員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잠깐만요,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원장 대신에 누가 나왔습니까? 답변하실 분 계세요?

○人文社會研究會事務局長 李錫熙 실무자만 나와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실무자 직급이 무엇입니까?

○人文社會研究會事務局長 李錫熙 말단 직원입니다.

○林鎮出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원장이 안 나오시면 책임자가 한 분은 나오셔야지요.

○委員長 李在昌 원장은 왜 안 나오셨어요?

○人文社會研究會理事長 崔松和 해외여행 중입니다.

○林鎮出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누가 한 사람은 책임자가 나와야지요. 그러면 실무자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韓國行政研究院運營支援部財政管理팀長 朴璟鎬 행정연구원 朴璟鎬입니다.

○林鎮出 委員 답변할 수 있어요?

○韓國行政研究院運營支援部財政管理팀長 朴璟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실무자, 들어오면서 들으세요.

2개월간의 연구기간 중에 22명의 인력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깥에서 내용은 들었지요?

○韓國行政研究院運營支援部財政管理팀長 朴璟鎬 예, 그렇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리고 인건비를 용역비의 59.1%로 과다하게 지출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韓國行政研究院運營支援部財政管理팀長 朴璟鎬 당초 이 프로젝트 자체는 2개월 만에 수행하기는 어려운 대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6개월

이나 7개월 정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두 달 만에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허많은 세월 놔놓고 두 달에 촉박하게 합니까?

○韓國行政研究院運營支援部財政管理팀長 朴璟鎬 저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총리실에서 우리가 발주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의도에 맞추어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러면 국무조정실장! 왜 이렇게 촉박하게 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연구용역 제목이 ‘규제 개혁 발전전략 수립 연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 5년간의 규제행정 전반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규제정책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를 차체에 종합 정리하고 새로 이것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10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10월 말에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이월을 전제로 해서는 계약이나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달짜리 용역을 계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큰 과제를 두 달 만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22명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林鎮出 委員 글썄 그렇게 하더라도……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林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월에 가서 무리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한 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林鎮出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국고 지원하는 경우는 일반대학도 그렇고 일반 연구기관이 통상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1%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31%를 차지하는 사실은 실제 연구에 충실하기보다는 워크샵이나 회식 같은, 뭐 회식도 좀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연구보다 행사 위주의 지출이 아닌가, 행사라든가 회식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다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본론보다 부수적인 것의 퍼센트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더 많다는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 사례를 보면 국민의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사업에서 전체 연구비의 91.5%에 해당하는 7843만 원을 인건비, 즉 행정연구원 2844만 원, 초청

연구원 1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문비가 행정연구원보다 더 많도록 3250만 원을 지출했어요. 웬 자문비가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서 자문비가 41%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자문비를 많이 써서 자문위원을,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도 의뢰를 했는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도한 자문비에 의존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문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남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규제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행정의 각 분야 전반에 걸쳐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달 내에 전체 분야를 커버하다 보니까 결국 평가대상이 그만큼 커졌고 또 대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회의나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쪽 분야의 경비가 전체 영업비의 30%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역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林鎮出 委員** 용역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를 들면 두 달을 남겨두고 이러한 방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연구원 이외에는 지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鎮出 委員** 지출의 퍼센트가 타 기관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지출은 국고의 낭비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주실 때에는 실무자들 보고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회식비도 쓰고 여러 가지 자문비도 쓰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행정연구원의 실무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도와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같이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육아에서부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화관광부에는 청소년 육성으로 되어 있고 총리실 산하는 보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2개의 부처를 하나로 해야 된다. 보호와 육성을 함께 해야지 보호는 국무조정실로 붙여 놓고 육성은 문화관광부로 붙여 놓으면 이것은 팔다리를 떼어 놓는 격이다. 안 된다.’ 하고 15대 때에도 많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해보니까 육성과 보호를 이런 식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나누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林鎮出 委員** 아주 헛갈리지요?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예. 그리고 지자체에 내려가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모두가 청소년조직의 행정적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본 위원은 여성부가 정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육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옹호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위원장이 여성부장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여성부 자체가 정부조직법을, 국무회의에서 그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부처이기 때문에 15대 때 합하지를 못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은 그런 것을 오히려 그 부처에서 둘 다 떼어서 여성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앞으로 저희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정부 전체의 조직과 기능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적극적으로 조정실장이 앞장서서 2개를 하나로 합해서 여성부로 붙여 주는, 여성부로 가면 아마 옹호 청소년 육성·보호를 합한 위원회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편람하고 백서하고 법령집 등 열 가지 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1억 700여 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지 않으셨는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좀 사정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당초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다른 이유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선진국에 가면 사실 백서 하나만 가지고 리포트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아주 세분야까지 백서나 편람 같은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포트 하나 쓰려고 해도 백서가 아직도 옹기 나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무조정실에서 국무회의 하실 때도 그렇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차제에 백서 하나만 보면 어떤 논문도 리포트도 또 연구발표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인력이나 업무에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제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국무조정실장도 국무회의에서 이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알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아시다시피 백서는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소년비행 문제도, 1985년에 내가 청소년비행 문제를 주제발표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일본을 비롯해서 선진국은 자세하게 경찰백서나 무슨 백서나 비행이 그해 그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2년, 3년, 5년도 가는 게 있지만, 특히 청소년 문제 같은 거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백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저희가 작년에 제1회 청소년보호 백서를 발간했고 올해 2회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이제 좋은 위원장 가서 겨우 1회, 2회 가는군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청 문제가 부처이기로 소방 문제 등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에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재난관리청인지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예방과 우선순위, 예산도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예산집행도 빨리빨

리, 정부가 결정을 딱 했으면 예산집행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킨 돈도 그렇게 쥐고, 천한 말 좀 쓰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어떤 일이든지 특히 이 재난 문제는, 천재지변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결정이 딱 되면 빨리빨리 지방에 내려보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안 내려보내 주어서 미적미적 시공회사가, 결국은 시공회사가 다시 덮치니까 지난번에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 우선 예산 집행이라든가 또 재난관리청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林鎮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嚴虎聲 위원 질의하시지요.

○**嚴虎聲 委員** 한나라당의 嚴虎聲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상임위인데 우선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는 더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정했는지 여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嚴虎聲 委員**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9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嚴虎聲 委員**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잖아요. 논의는 했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논의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嚴虎聲 委員**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국무조정실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면 중간중간 상황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것은 오찬 때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이번에 태풍의 피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은 해일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嚴虎聲 委員** 그런데 문제는 해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경고성 홍보가 전혀 안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태풍이 불어오는 그 날짜가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는 만조 때입니다. 그렇지요?

만조 때에 바람이 세게 불면 당연히 해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부는 시점을 감안해서 해안지역에는 해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즉각 사전에 해안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전부 해일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태풍 나는 그 시점에 제 지역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끝나고 나서 지역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전혀 대피에 대한 지시랄까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방재를 맡고 있는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이고 또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이 국무총리한테 있는데,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이런 피해를 미리미리 감안해서 대피령을 내리고 했으면 피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방재난방재청이 발족이 되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태풍이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면 민방위동원령 같은 거 내리는 게 옳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금년 태풍은 아까도 얘기드린 대로 강한 바람과 해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일 피해는 지난 사라호 태풍이 5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4년 전에

해일 피해를 우리가 심하게 입은 이후에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소 해일 피해에 대한 대비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원인을 다시 한번 재검검하고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대책, 조직이나 인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피해 유형은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태풍을 맞아서 다 깨졌어요. 그것도 보고는 받으셨지요?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태풍에 맞아서 다 깨졌단 말이지요. 깨지면서 거실이나 집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파편에 맞아 가지고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또 베란다 유리창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파손이 일어났단 얘기입니다. 이 피해가 사실상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유리창에다가 테이프를 겹겹이 붙여 놓았으면 유리창 파손도 막을 수 있고 또 파손이 되더라도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유리 파편이 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유리창이 밑으로 떨어져서 주차해 있는 차량에 맞는 차량 파손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사전에 “태풍이 이렇게 불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리 파편이 사람에게 튕 것이고 또 밑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부숩질 것이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진 국민에게 사전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피 태풍 부는 그 현장에, 지역구인 저희 집 아파트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방송도 없어요. 국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만 방송을 해 주든지 아니면 반상회 조직을 통해 가지고 반장을 시켜서 집집마다 얘기를 하게 하든지, 또 10시 넘어가니까 정전이 되는 바람에 전화마저도 불통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반상회 조직을 활용해서 집집마다 다니게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피해는 안 당할 거라 이거지요.

제가 태풍 현장에 내려가 있으면서 정말 답답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당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테이프를 좀 붙이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겨우 조금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예방조치를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3쪽에 보면, 마항에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 해외연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2회에 걸쳐서 26개 단체에 5588만 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6개 단체에 참여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구체적인 단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嚴虎聲 委員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아닙니까?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嚴虎聲 委員 26개 단체의 명단을 좀 주세요.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예.

시민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시민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지원하는 부서인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에 몇 개의 지회가 갖추어져 있다든지, 회원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든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냥 협의회에 의뢰해서 협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예.

○嚴虎聲 委員 다음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님, 청소년문제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조건 만남’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성인 광고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嚴虎聲 委員 이 ‘조건 만남’이라는 것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원조 교제’와 함께,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을 띤 성매매 관련 단어, 인터넷 용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원조 교제’라

고 해서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 사이의 1 대 1 관계, 퍼슨 투 퍼슨 관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성매매행위가 이제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여성 쪽에서 아예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팔겠다고 내놓는 것입니다.

내 키가 얼마이고, 몸무게가 얼마이고, 내 몸매 사이즈가 어떻고, 1회에 얼마, 또 성행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건 만남’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올해의 경우 인터넷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매월 단위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데……

○嚴虎聲 委員 지금 ‘조건 만남’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 아닙니까?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들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1 대 1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조건 만남의 피해 여성 모임’이라는 사이트도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 보름 동안 하루 3시간씩 청소년 관련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무려 52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몸을 팔겠다고 공개적으로 성매매 현장에 뛰어들 사례를 15일 동안 무려 52건을 적발했습니다.

15일 동안 52건을 적발할 정도라면 이런 것을 단속하라고 만들어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아마 수백~수천 건을 적발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적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되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5일 동안 했는데 이것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런 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성년이건 미성년이건 이렇게 여성들이 자기 몸을 공개적으로 팔겠다고 나서는 이 현실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嚴虎聲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접 모니터링까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신상공개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의한 적발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상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터넷의 특성상……

○**嚴虎聲 委員** 지금 청소년보호위원장께서 '1대 1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조건 만남' 관련 모임 가입자가 3000명이 넘고, 1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어요. 아예 버젓이 인터넷상에 이런 동호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 공창이, 율락가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 단속하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국감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제 지적에 동의하시면 이 '조건 만남'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알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리고 몇 가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嚴虎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일

문일답식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이미 일문일답에서 하신 답변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田稼源 위원님이나 李訓平 위원님을 비롯해서 아예 구두질의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과 또 구두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정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두질의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국정감사 전까지 답변서가 각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무총리실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감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번 발생한 태풍 매미호에 대해서 그간 정부에서 조처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과 또 작년 루사호 태풍 이후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막상 이번에 또 태풍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실상 미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질의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이번과 같이 태풍이 예정됐던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정부가 최소한 조처해야 될 사항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태풍피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미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정부 측의 반성과 또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무총리 또 국무조정실장은 각종 재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재

점검해서 다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번 재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실소관 기관의 2002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예산 부적정문제라든지 또 해양연구원의 서해임해연구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미진사항 등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산의 이·전용문제, 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의 추후변경문제, 예산의 목적 외 집행문제 등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치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과 또 이미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적어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예산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질서와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산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국무총리실소관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무총리실은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기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각 부처에 출선 수범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국무총리실소관 예산은 다른 사업부서 예산보다 소위 예산분류상 경상비에 속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낭비가 수반될 수 있고 또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기 쉬운 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및 국가보훈처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들께서는 좀더 수고해 주셔서 18일 전체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찬시간을 지나서 늦도록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연구

단체의 위원장님, 또 각 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出席委員(17人)

金滿堤	金文洙	金富謙	金元吉
金允式	朴炳錫	朴柱宣	安大崙
嚴虎聲	李性憲	李在昌	李訓平
林鎭出	張泰玩	田塔源	趙在煥
崔在昇			

○請暇委員(1人)

李海瓚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尙元鍾
전문위원	金昊晟

○政府側參席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李永鐸
기획수석조정관	趙泳澤
총괄심의관	金秀道
일반행정심의관	金錫民
외교안보심의관	申正秀
경제조정관	朴鍾九
재경금융심의관	權赫世
산업심의관	禹周河
농수산건설심의관	金昊源
사회수석조정관	崔慶洙
복지심의관	朴鐵坤
노동여성심의관	李弼雲
교육문화심의관	鄭東勳
안전관리개선기획단부단장	宋光運
심사평가조정관	李正煥
심사평가1심의관	權忠植
심사평가2심의관	車義煥
조사심의관	具本榮
규제개혁조정관	朴琦鍾
규제개혁1심의관	宋裕鐵
규제개혁2심의관	崔大鎔
연구지원심의관	金春錫
수질개선기획단부단장	俞宗相

국무총리비서실

비 서 실 장
 정 무 수 석 비 서 관
 국 회 담 당 비 서 관
 정 무 기 획 담 당 비 서 관
 민 정 수 석 비 서 관
 민 정 담 당 비 서 관
 공 보 수 석 비 서 관
 공 보 담 당 비 서 관
 연 설 담 당 비 서 관
 의 전 비 서 관
 총 무 비 서 관

金 大 坤
 金 在 晟
 金 秉 顯
 張 東 煥
 鄭 益 來
 許 新 旭
 金 德 奉
 李 容 鎬
 李 煥 相
 盧 柄 寅
 金 熙 喆

인문사회연구회

이 사 장
 사 무 국 장
 기초기술연구회
 사 무 국 장
 산업기술연구회
 이 사 장
 사 무 국 장
 공공기술연구회
 이 사 장
 사 무 국 장

崔 松 和
 李 錫 熙
 趙 性 福
 朴 元 勳
 梁 潤 燮
 朴 炳 權
 吳 正 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사 무 처 장
 상 임 위 원
 상 임 위 원
 조 사 1 국 장
 조 사 2 국 장
 민 원 관 리 관

李 沅 衡
 金 周 燮
 趙 漢 裕
 金 光 鎭
 李 炯 求
 朴 演 守
 朴 在 赫

한국행정연구원

운영지원부재정관리팀장

朴 璟 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李 承 姬
 車 政 燮

비상기획위원회

위 원 장
 사 무 처 장
 상 근 위 원
 기 획 평 가 관
 동 원 기 획 국 장
 비 상 관 리 국 장

尹 光 雄
 陳 炳 國
 曹 南 鎭
 崔 在 景
 金 池 奉
 金 炯 石

금융감독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상 임 위 원
 상 임 위 원
 공 보 관
 기 획 행 정 실 장
 감 독 정 책 1 국 장
 감 독 정 책 2 국 장

李 晶 載
 李 東 傑
 梁 天 植
 李 佑 喆
 李 斗 珩
 昔 一 鉉
 金 錫 東
 尹 庸 老

○其他參席者

경제사회연구회

이 사 장
 사 무 국 장

文 石 南
 玉 台 煥